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 및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3월 19일(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자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교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동구청소년자활지원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 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의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작가회의,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민족예술단'우금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27개 단체, 가나다순)

- 연락처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66-6(2층) ☎ (042) 628-5013~4 | FAX (042) 628-5016
운영위원장 이찬현(010-8825-1408)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대표인사

이동규(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 참석자 소개

■ 경과보고와 조직체계

이찬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사무처장)

■ 2008년 사업계획 및 대전교육 10대 의제

권성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정책실장)

■ 발족선언문

김경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 질의응답

I. 발족의 배경

1.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도간, 학교 간, 학생간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인해 교육 현장이 시장으로 변질되고 이는 교육의 불평등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마구잡이로 발표한 각종 교육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시되면 교육현장은 오로지 경쟁만능의 정글로 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신정부의 교육시장화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전시민적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대전시교육청은 이러한 조류에 편승해 성적제일주의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여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적우수중학생에게 고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교배정원칙을 변경하겠다는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이 성적만이 우선시 되다보니 교육환경은 열악해 질 수 밖에 없고 동서교육격차 등 대전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3.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과 관련된 권한 대부분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것으로 보여 대전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II. 참여단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동구청소년자활지원관,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 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작가회의, 대전충남통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민족예술단'우금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충남지회(27개 단체)

Ⅲ. 집행부 구성

1. 상임대표 : 김경희(대전여민회)
2. 공동대표 :
김남숙(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김용분(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안정선(대전
환경운동연합), 이동규(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양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3. 운영위원장 :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찬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4. 정책위원장 : 권성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5. 운영위원 : 참여단체 실무자

Ⅳ. 2008년도 사업계획

(1) 시민단체 의견 수렴 및 2008년 대전교육의제 선정(3월)

- 참가단체별 회원들 교육관련 의견 수렴
- 교육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

(2) 의제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수립(4월)

- 선정된 의제에 대한 월별 사업계획 수립
-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집행
- 참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법 강구

(3) 대학평준화 등 입시제체 개선을 대중강연회(6월)

- 일시 : 6월 18일(수) 오후 7시
-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혹은 대전광역시청 대회의실
- 강사 : 홍세화, 진중권 혹은 우석훈(88만원세대)
- 내용 :
 - 가) 입시철폐 및 대학서열화 폐해
 - 나) 대학평준화 등 사교육 폐지를 위한 대중강연

(4) 교육 관련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9월)

- 예산 및 교육정책 분석을 통해 연관성 측정
- 대전지역 교육현안 마련을 위한 정책 마련
- 수월성 위주의 정책에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

(5) 시교육청 정책 평가 및 2009년 교육정책 제안(10월)

- 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하여 시민 및 현장 교사들의 평가에 대하여 설문조사
- 2009년 및 장기적인 교육정책 마련

- 2008 대전교육 10대 의제 -

1. 동서교육격차 해소
2.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3.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4. 교육환경 개선 - 학교건물 내 석면 제거, 교실 냉난방 시설 완비
5. 대전시교육청 학교시장화 교육정책 저지
6. 서남부지구 등 학교 신설 문제
7.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올바른 시행
8. 청소년인권확보
9. 지역주민에 학교시설 개방
10. 치솟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

1. 동서교육격차 해소

1) 동서교육격차 현황

(1) 특목고 2007년 합격생 수로 본 동서 교육격차(동서교육격차해소를위한대전시민연대)

①대전외고

동부지역 : 서부지역 =22.8% : 77.2%, 총306명(타 지역 제외) 중 동부지역(동구, 중구, 대덕구) 출신 70명(22.8%), 서부지역(서구, 유성구) 출신 236명(77.2%)

②대전과학고

동부지역 : 서부지역 = 12.5% : 87.5%, 총71명(타지역제외)중 동부지역(동구, 중구, 대덕구) 출신 9명(12.5%), 서부지역(서구, 유성구) 출신 61명(87.5%)

※ 전체 중학생 대비 동부와 서부의 비율은 42.8% : 57.2%임

(2) 2006년도 행정자치구별 사교육비 현황 (대전교육연구소)

(단위 천원)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전시평균	둔산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39	181	275	356	276	277	408

2)동서교육격차 해소 방안

(1) 종합교육지원센터 설치

☐ 동구, 중구, 대덕구는 학원, 독서실 등과 같은 학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 따라서 이러한 사적 시설을 공공적 성격을 갖는 종합적인 지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일명 '종합교육지원센터'를 동부지역에 다수 설치해야 함

(2)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 확보

☐ 행정자치구별 조례제정현황 (최순영 의원실 자료)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65%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20%(5개 구청 중 유성구청 한 곳)에 지나지 않음

☐행정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최순영 의원실 자료)

◎ 2006년 자치구별 학생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단위 : 천원)

대전동구 : 10.0, 대전중구 : 19.9, 대전대덕구 : 8.4, 대전서구 : 5.9, 대전유성구 : 43.7

충남당진 : 197.7, 충남청양 : 187, 충남태안 : 173.7, 충남계룡시 : 121.5, 충남공주시 : 117

(3)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내실화

○ 지역교육격차해소를위한대전시민연대의 노력으로 대전시에서는 2007년 5월 11일 조례를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임

(4) 동부지역 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동부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목적의식적으로 펴야 함, 동부지역 학생들에게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타 지역에 비해 줄여나가거나 자연 감소분에 해당하는 학급을 줄이지 않음으로써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는 정책 필요 (대전시 학급당 학생수 초등 32.7명, 중 35.6명, 고 34.1명)

2.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

1)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격

- ① 성격 : 비영리적인 공익적 법인으로 독립
- ② 사업
 -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 기타 공공기관의 급식 식재료 공급
 - 식재료의 안정성 점검과 위생강화
 - 식재료의 전처리
 -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와 대안 제시
 -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
 - 학생들의 생산체험 학습
 - 공동조리를 통한 위탁업무 해소
 -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반업무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방안

-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조항을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담아 선택사항이 아닌 강

제규정으로 규정해야 함

-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초 시·군·구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광역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함
- ③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 ④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해야 함

2)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

(1) 무상급식의 필요성

- ① 교육복지와 평등의 공공성 확립
- ② 학교급식은 하나의 교육과정

(2)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07년 농어촌지역 학교 무상급식 지원 현황

- ① 초등학교(7교) $529\text{명}/1,600\text{원}/180\text{일} = 152,353,000\text{원}$
: 산홍초, 동명초, 세천초, 산서초, 장동초, 남선초, 기성초
- ② 중학교(1교) $107\text{명}/2,000\text{원}/180\text{일} = 38,520,000\text{원}$
: 기성중 [계 : 190,873,000원]

(3)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소요예산

구 분	학교수	학생수	급식인원	급식비		비 고
				1인1식(원)	년간(백만원)	
초등학교	136	125,958	123,374	1,630	36,080	
특수학교	4	786	577	-	649	인건비미포함
계	140	126,744	123,951		36,729	

(4) 경남교육청 "2010년까지 초·중 무상급식" 발표

3.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1)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실태

○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도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과거 육성회비)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음

2)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

(1) 헌법 제31조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 학교운영지원비 결정

학교운영지원비의 인상률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여향 및 수업료 인상율,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교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함

<표> 05년 중학교·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 결정단위(단위 : 개교)

시도	중·고 학교수	징수액 실질 결정단위							
		학교운영위원회		교장단협의회		교육청		기타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대전	130	1	0.8%	129	99.2%				

<출처 : 교육부, 2005년 국정감사 자료, 교육부→ 최순영의원실>

4) 대전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현황

(1) 대전광역시 공·사립 중·고등학교장단에서는 2008년 학교운영지원비를 전년대비 2.99% 인상안을 제시함(고등학교 연 289,200원, 중학교 연 210,720원)

(2)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규모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비율

○ 2008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대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1.2%에 해당됨.

대전광역시 중학교 2007년 4월 기준 85개교 67,652명임.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총액은 142억 5411만 3120원임

급지	학생수(명수)	학교운영비(연액):원	총액(원)
1급지(가)	67,544	210,720	14,232,871,680
2급지(나)	108	196,680	21,241,440
			14,254,113,120

5) 학교운영지원비 사용 실태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에서 징수, 학교 내에서 사용하고 있음. 사용용도는 크게 세 가지인데, 교사의 연구수당지급, 비정규직인 행정실 직원 급여, 교육관련 기자재 구입임. 이들 비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충당되어야 할 비용, 이는 공교육이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켜 의무교육의 취지를 흐리는 것으로, 무상의무교육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개선대책

(1) 정부와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확대

대전광역시의 경우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회계 대비 학교운영지원비는 2008년도 예산 약 1.2%에 불과함

(2) 초중등교육법 개정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지원비가 책정, 징수되고 있음, 그러나 진정한 무상의무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야 하고, 이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의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4. 교육환경 개선

－ 학교건물 내 석면 제거, 교실 냉난방 시설 완비 －

1) 학교건물 내 석면 친환경 소재로 교체

(1) 현황

① 2006년 우리나라 석면 수입량은 모두 5만6000톤(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자료), 이는 지난 2000년 4만1000톤에 비해 1만5000톤이 늘어난 것,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수입2000년 1만2000톤에서 2006년 4만7000톤으로 4배나 늘어남, 이들 수입 석면함유제품은 주로 건축자재와 자동차부품 등으로 사용됨

② 정부는 2006년부터 석면이 포함된 일부 건축자재와 브레이크라이닝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2009년부터 모두 금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오래된 학교건물은 이미 석면을 함유하고 있음,정부는 이런 건축물에 포함된 ‘과거의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야 함

(2) 대책

- ① 校舎의 석면 함유 실태를 전수조사
- ② 친환경소재로 교체

■ 건축 자재 중 석면함유 물질

구분	제품	석면함유량(%)	조합물(Binder)	비산여부
벽, 천장	스프레이외장	1~95%	포클랜드 시멘트 실리카 나트륨 고착제	비산가능
	미장재	1~95%	포클랜드 시멘트 실리카 나트륨	비산불가

	석면-시멘트 시트	20~50%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Spackle	3~5%	석회풀, 카세인, 인공수지	비산가능
	이음 접합재	3~5%	아스팔트	비산가능
	하드보드 판지	80~85%	풀, 석회, 진흙	비산가능
	비닐 벽지	6~8%		비산불가
	단열 절연판	30%	규산	비산가능
바닥	비닐-석면 타일	21%	폴리염화비닐	비산불가
	아스팔트-석면 타일	26~33%	아스팔트	비산불가
	바닥용 탄성수지	30%	드라이 오일	비산불가
	매스틱 접착제	5~25%	아스팔트	비산가능
지붕 및 외벽	지붕 펠트	10~15%	아스팔트	비산가능
	펠트 싱글	1%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지붕 싱글	20~32%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외벽 싱글	12~14%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물막이 판자	12~15%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가능
파이프 및 보일러	시멘트 파이프	20~90%	포틀랜드 시멘트	비산불가
	블록 단열재	6~15%	탄산 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전성 파이프 덮개	50%	탄산 마그네슘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슬레이트	90%	실리카 칼슘	비산가능
	종이 테이프	80%	폴리머수지, 풀	비산가능
	연마제	20~100%	진흙	비산가능

2) 교실 절반 에어컨 없는 ‘점통’ - 냉난방 시설 설치

(1)현황

- ① 2007년 여름방학 후 계속되는 무더위로 학생들이 점통수업을 하면서 시급히 냉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에 따르면 실내온도는 26~28℃로 유지해야 함
- ② 대전지역 학교의 에어컨 보급률(2007년)은 초등 40.7%, 중학교 52.9%, 고교 79.6%임(에어콘 미설치 교실 수 : 초등학교 5,058, 중학교 2,413, 고등학교 1,195개 교실)
- ③ 에어컨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도 전기료 부담에 대부분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2)대책

- ① 대전시교육청은 2012년까지 에어컨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최대한 집중투자를 하여 2009년까지는 완료해야 함
- ② 각 학교들이 에어컨을 실제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전기료 지원 필요

5. 대전시교육청 학교시장화 교육정책 저지

1) 우수중학생에 대한 고교선택권강화 저지

- ① 2.26 김신호 교육감 기자회견 : 성적 우수 상위 10%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고교배정원칙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 ② 이는 10%의 성적상위자에게 특혜를 주는 성적지상주의에 물든 비교육적인 정책
- ③ 고교평준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정책

2) 초·중학생 전국단위 일제고사 저지

○ 10년만의 전국단위의 일제고사 부활로 학교서열화와 사교육비 증가 우려

□ 2008년 초·중학교 전국단위 일제고사 계획

- 3. 6 중학교 1학년 시·도연합진단평가, 2,3학년 국가수준 진단평가
- 3.11 초등학교 4,5,6학년 국가수준 진단평가
- 10.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중 3)
- 10.29 중학교 3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 12.23 중학교 1,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 12월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3)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의한 무분별한 특목고, 자사고 설립 저지

- ① 대전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을 전제로 동부지역에 과학고 신설 계획
- ② 자사고 설립의 요건인 법정전입금 20%이 인하되면 대전지역에도 자율형사립고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 있음
- ③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특목고와 귀족학교로 전락한 자사고의 설립 저지

4)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제정

○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2006. 9.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 2007. 3. 23. “동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시행

※ 개정학원법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해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에는 교습시간 제한 규정이 없음.

○ 타 시·도의 사례

서울, 충북 - 11시(서울은 시 의회에서 24시간 허용하는 수정안 제안)

부산, 대전, 광주, 경남 - 제한 없음

나머지 시도 -12시(충남은 중학생 10시, 고등학생 12시)

○ 학생의 건강권, 학교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오후 10시까지 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함

6. 서남부지구 등 학교 신설 문제

1) 문제의 원인

- (1) 대전교육청 학생 수요 잘못 파악
- (2) 학교설립을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노력 미흡
- (3) 재원 마련 없이 계획 수립

2) 제언

- (1) 대전광역시는 시교육청에 부담해야 할 435억을 지불하고, 서남부 신도시 건설의 전체적인 계획을 짜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하며, 2011년 6월 준공될 때까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특수고 1개 포함)를 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 불가능할 때는 현재의 개발을 중단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 (2) 학교용지부담금은 시행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 대행사임. 따라서 대전시에서 시행사가 지불한 돈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함
- (2) 학교용지부담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교육감의 권한이 막강함, 학교설립에 대한 대안이 없을 때는 교육감이 택지개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요청권이 있음,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교육감은 공사중지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음
- (3) 일반적으로 택지를 먼저 개발하고 학교 등 공익시설을 짓는 경향이 있으나 학교 등 공익시설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후 이에 따라 택지개발이 되어야 함
- (4) 학생 수용에 대한 예측 책임은 교육청에 있음, 유관기관의 협조 아래 치밀한 분석을 통해 학생 수용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 (5) 시공사, 지자체, 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대한 청사진을 계획함에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된 후 택지개발을 하여야 함

7.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교육환경 개선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의 올바른 시행

1) 현황

- ① 2006년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예산은 전체교육예산의 2.3%(전국최하위)에 그침
- ② 특수학급신증설, 방과후 활동비 및 교통비 지급 등의 성과를 거둠
- ③ 지난 4년여간 장애인교육주체들의 투쟁의 성과로 제정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함 - 올해부터 장애인교육관련 예산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됨
- ④ 2006 특수교육발전협의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파견한 특수교사를 대전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철수시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교사 배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모범사례인데도 이를 되돌리고 있음

2) 향후 대책

○ 2008년 5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공포와 함께 이 법의 성실한 시행을 요구하고 장애당사자와 학부모, 현장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제안해 나갈 것임

8. 청소년인권확보

1) 청소년 인권 침해의 현실

○ 2004년 학교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46일간 단식을 했던 강의석(서울대광고3)군의 사례 - 예배 선택권이라는 작은 문제하나를 풀어가는 데에도 46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야 그 문제제기가 겨우 수용되는 현실은 청소년인권의 암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음

2)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 공부도 소중하지만 인간다운 삶이 먼저

○ 입시구조 속에서의 학교는 청소년인권을 억압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음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은 안전한가?

○ 2004년 10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조사하여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32.4%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이중 9.9%는 임금체벌, 폭행 피해 2.8%, 성적피해 0.4%로 높게 나타나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확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 방식도 사업주와 구두 계약 46.9%, 별도의 약속이나 계약을 하지 않음 40.4%, 정식서류로 계약 9.2%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당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남

4)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제언

(1) 학생자치와 인권을 위한 지름길 ‘학생회 법제화’

(2)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규정하는 참정권의 확보

①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는 “18세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로부터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② 청소년의 18세 선거권 획득의 문제는 청소년이 갖는 사회정치적 지위를 규정하는 문제로서 그 사회적 의미가 있음

(3) 청소년의 문화·여가시간 활용 확대

(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제도화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권리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우 미비한 수준임, 또한 청소년의 노동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상담, 정보제공, 해결 등의 종합 지원을 전담하는 창구가 없음, 청소년 취업과 관련된 노동법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칭)를 개설, 종합적인 청소년노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나서야 함

9. 지역주민에 학교시설 개방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 ‘대전교육혁신방’ 토론자료 참조>

1) 왜 개방이 필요한가?

○ 학교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산이며, 국가의 재산은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 지역주민 공공 이익을 위해 교육의 대상을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시켜 학교시설을 개방함에 따라 학교시설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진정한 주민 여가 활동 공간이자 생활 중심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발전할 수 있음

2) 개방을 꺼리는 이유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대하여 우선 망설이고 있는 문제는 개방했을 때 시설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때 복구가 어렵고 유지관리에 비용 발생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음, 학교는 건물규모가 커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를 관리하기에 벅참,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 외부에 개방하기를 망설이고 있음

3) 학교시설물 활용 방안

시설	강좌
교실(강의실)	일반상식 · 인성교육, 독서교육, 글쓰기교육, 동화구연, 수지침, 꽃꽂이, 바둑, 공예(퀼트, 한지공예, 선물포장)
음악실	노래교실, 악기연주
미술실	유화, 수채화, 서예
어학실	외국어교육(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컴퓨터실	인터넷교육, 한글·엑셀·파워포인트·포토샵 교육, 자격증대비반
강당	요가, 에어로빅, 헬스, 댄스스포츠, 무용
운동장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4) 개방의 우선 순위

학교의 모든 시설을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 개방해야 할 시설은 운동장과 도서관임

5)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전제 조건

- (1) 학교시설의 현대화
- (2) 시설 관리 교직원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 (3) 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 및 지역민 등의 의식개선

10. 치솟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

1) 현황 -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등록금 폭등 사태!!

(1)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가까이 폭등하여 4년치 등록금 평균이 3,000만원을 넘어섬,올해 사립대 인상률은 평균 6~9%, 국공립대는 8~14%로 물가인상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전년도보다 6% 올린 고려대의 경우 신입생 1년치 등록금이 의학계열은 입학금까지 포함해 무려 1,400여 만원이나 되고, 공학계열 1,091만원, 인문·사회계열 831만원에 달함

(2) 이와 같은 등록금 폭등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고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음

(3)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들 대부분이 졸업과 동시에 88만원 세대로 전락한다는 사실임

2) 대안

(1) 등록금 상한제 실시

현재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장이 책정하게 되어있는데,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의 2~5배가 넘게 등록금을 올리고 있음, 따라서 등록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초과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산하에 등록금 심의회를 설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함

(2) 등록금 후불제 실시

최근 등록금 후불제 논의가 이슈화 되었으나, 저소득층의 학비 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도입은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원(MBA)등 졸업 후 높은 취업률과 고수입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임, 정부가 이처럼 일부 특수 대학원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지가 변질된 것임, 고소득층 보다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 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후에 학자금을 갚아 나가도록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어야 함

(3) 등록금 차등책정

현재의 대학 등록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차등 책정이 되지 않아,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국공립대만이라도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은 더 줄이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차등책정해야 함

(4) 등록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 관리 실시

현재의 대학 예·결산을 분석해 보면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 전입금은 거의 없는 반면 등록금만으로 학교 건물을 신·증축하고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대학등록금의 교육비용 이외의 사용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회계에 있어 등록금 계정을 독립시켜 그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함

<보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겉으로 보면 ‘자율’ 확대지만 이면적으로는 ‘효율’을 위한 ‘경쟁’의 철학

1. 이명박 정권 교육정책(영국식 모델) : 학교시장화 정책의 전면화

- 계급성에 충실한 학교시장화 정책을 중핵으로 학력경쟁 강화를 통한 학교 학원화와 고등교육의 기업화로 준-시장(quasi market) 완성
- 이명박 정권은 강남정권임에도 ‘실용정권’이라고 가장

2. 이미지 전략과 본질

- 대비수사 : 평등 대 수월성과 다양성, 규제와 통제 대 자율과 지원
‘평등주의’가 교육을 망쳤다고 이미지화하고 있음, 평준화, 수능 등급제로 고통과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하고 있음,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핵심으로 ‘사교육 절반 프로젝트’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이미지화 시도

- 총슬로건으로는 대중의 정서와 요구에 맞춰 포장했지만 실내용은 부유층과 자본의 요구에 근거한 계급적 기획을 전면화하고 있음.

- 사회양극화를 학교양극화로 이전시키는 교육시스템 구축 정책 : 낮은 학교 단계부터 학교분화 정책(최소 고교까지 서열화), 강력한 학교일상통제 및 경쟁 장치 구축

3. 공약으로 본 주요 교육정책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5대 프로젝트

■ 총슬로건 :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 주요 내용

1)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귀족학교 300정책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 교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

- 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업그레이드 버전, 등록금과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의 완전한 자율권 확보. 이명박 후보 공약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재단 전입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게 되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교육정책을 경제 정책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결합하여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강북 지역에 자율형 사립학교를 세우고 지방에 우수학교 명목으로 기숙형 공립학교를 육성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전문계 고등학교 중 특성화 고등학교가 현재 130개교 38,043명에 이르고 있음. 마이스터고가 현행 특성화고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학교 운영에 산업체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게 되면 전문계 고등학교를 기업의 하위단위로 재편하게 될 것임
-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교 지정 정책은 농산어촌 교육과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 이러한 학교의 지정이 해당 지역의 고교 체제와 어떠한 연관을 갖게 될 것인가와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구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300개 학교에서 제외된 학교는 3류학교로 낙인찍히게 됨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 영어 교사 양성 및 원어민 교사 채용 확대 등

-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매해 3천명 양성하고 영어 수업외의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도록 한다는 정책은 영어로 하는 수업을 받기 위한 사교육을 유발 시키게 될 것임, 인수위 단계에서 범국민적 저항으로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으로 수위가 낮추어졌지만 끊임없이 다른 과목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임
- 영어 공교육은 영어 공용어 또는 상용화의 전단계
- 조기 유학 허용 등을 규제 완화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인천 송도 외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제주 영어 타운에 외국학교 설립 등을 추진할 것임
- 미국 비자 등의 문제와 연관 지어 보면 미국단기어학연수가 봇물을 이룰 것
- 영어가 자본이며 계급화의 도구

3) 3단계 대입자율화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수능과목 축소 -> 완전 자율화

- o 대학입시 정책은 학벌서열체제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없이 입시 전형 요소를 변경하는 수준의 정책이 반복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임, 2008년 대학입시제도가 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추진하였지만 대학 서열의 상위권 대학이 생활기록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전형을 고집하는데서 비롯된 것임
- o 3불정책(본고사, 기여 입학금, 고교 등급제)을 전면 해체하는 대입 자율화 정책은 대학과 고교의 서열체제를 강화시키고, 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임
- o 고교 다양화 300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 고교 평준화체제를 해체시키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를 제도화하는 정책임. 결국 고교체제와 대학을 평준화해체와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발상임
- o 수능 등급제 파동 등을 이유로 2009년 수능부터 등급제 폐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명목으로 추진했던 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이 유명무실해지고 수능과 대학별 전형이 중시가 되는 입시로 회귀하게 될 것임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 교육제

“학교가 기초학력과 바른인성 만큼은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초중고 단계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화, 학교별 정보 공개 등

- o 미국 부시 정부의 NCLB (no child left behind) 정책의 한국형 복사판 정책임. 영국 학업성취도 평가와 발표를 학교선택 자료로 제공하는 것과는 동일, 영국에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이 편법과 속임수의 장으로 망가진 것은 ‘위기의 학교’ (우리교육, 닉 데이비스 저)를 보면 생생히 나와 있음
- o 초등학교 단계의 전집형 진단고사와 중 고등학교의 전집형 학업 성취도, 학교별 학력공시제도가 결합하게 되면 현재의 과도한 입시중심 교육을 더욱 격화시키게 될 것임
- o 대입자율화와 맞물리면 ‘고교등급제’와 연결됨. 학교의 등급을 매기는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주는 셈.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교원정책)

“은 동네, 은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원간의 경쟁강화, 교육과정 유연성 강화, 교육여건 개선 지원 강화

- 교원평가 결과를 연수, 자격과 연계한다는 수준에서 공약을 내세웠으나 장기적으로 교사자격연한제도와 결합시키는 평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정권 초기에 교원평가 정책 등 교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교원단체의 반발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책을 구사하려 할 것임
- 교원 평가의 결과를 연수, 자격과 연계한다는 것은 교사자격연한제도를 도입한다는 발상임, 이는 교원평가, 학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로 교원의 집단 이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영 미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는 것임

4.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본질

학교시장화 정책의 전면화

1)성과주의(기업식 운영)에 의한 학교 간 경쟁 시스템

- **학교 간 경쟁체제** : 고교다양화 300정책(=귀족학교300), 학력평가 전면화와 결과 공개, 비교, 자립형 사립학교 100개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평준화 체제는 와해되게 됨
- **교원 간 경쟁체제** : 구조조정 (산발적으로 제출되어온 정책들의 총체화. 지방직화, 자격연한제, 연수의무제, 교원평가, 성과급)
- **대입자율화** : 학교시장화의 방향성을 강화하고 각각의 경쟁을 하나의 경쟁구도로 껴는 역할

2)정보공개와 평가에 의한 교육통제시스템으로 개편

- 초중등은 지자체 이관, 고등교육 자율확대 : 교육부 권한 축소,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권한 확대 (“유연하고 신속한 행정지원체계”로 포장)
- 학력평가 결과 등 각종 교육정보 공개로 책무성을 강화하는 교육통제시스템 완비

5.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 진보적 교육노동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효율과 경쟁만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응하여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함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발족선언문

지역시민·사회단체 연대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인해 교육 현장은 나날이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에서 더 나아가 공교육 현장을 경제적 능력에 바탕을 둔 상류학교와 하류학교로 계급적으로 양분하려 하고 있다.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이미 굳어져가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바탕으로 교육양극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이는 300개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공연한 교육포기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떤가? 대전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쟁원리에 입각한 성적제일주의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서 학교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다 신정부의 교육정책의 조류에 편승해 성적우수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정책은 계층간 학력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결국은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좌절을 안겨 줄 수 밖에 없다. 성적이 우선되다 보니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2007년 국정감사 자료에 나오는 수치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과 관련된 권한 대부분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고 한다. 이러한 방침은 시·도교육청의 경쟁을 부추겨 성적제일주의 정책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자율을 가장한 경쟁의 철학이다. 한마디로 학교시장화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 학교시장화 정책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사치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이명박 정부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들을 바꿔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참여단체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연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년 3월 19일

교육의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